

최악상황때 물리력 불가피

日 독도 수로 측량...정부 대응책

모든 외교적 수단 동원 자진 철회 유도 '분쟁화' 日 의도 감안...나포는 피할 듯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 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주 중 일측이 측량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당국은 우선 일본의 측량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수단을 가동하면서도 실제 측량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일본의 이번 측량 계획을 EEZ 도 발행위로 규정된 만큼 일본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도발에 대한 반(反)작용의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태세다.

◇일 해상보안청 선박 나포 가능한가=최악의 경우 나포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일본이 측량에 나섰을 경우 해경을 통해 우리 측 EEZ에 진입하기 전 기수를 물리도록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이번 사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우리측 EEZ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심각한 파장을 감안해 EEZ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 선박이 실제로 EEZ에 진입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다른 나라 선박이 항해상 필요에 의해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제법 상의 관례인 '무해(無害) 통항권'이 있긴 하지만 이번 일본의 측량계획은 영해가 아닌 EEZ와 관련한 사안인데다 항해 목적도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

어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측량에 나설 선박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는 국제 관습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국 정부선박에 대한 '국가면제'(state immunity) 관행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EEZ에 진입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라는 입장지만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나포, 검색 등 조처는 국제여론 악화 가능성을 감안, 가급적 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영토분쟁 피하기' 기조는 불변=정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재부각 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숨은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에선 변함이 없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양국간 마찰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재부각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에 정부로서는 외교압박을 통해 사전에 측량을 막는 것이 최선이고 측량에 나설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EEZ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선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EEZ에 진입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피하면서 양국이 경계선 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EEZ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기조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일, 숨가쁜 움직임=14일 일본측 수로 측량 계획이 알려진 이후



18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은 일본의 독도 주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수로측량 계획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대응 양태는 사안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14일과 17일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아침 청와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 윤광웅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EEZ 관련 관계 장관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17일 라종일 주일한국대사가 일본 아치 소타로(谷内正太郎)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日 탐사선 대응 예상 시나리오

- 1 주일 한국대사, 日 외무성 사무차관과 외교장관을 통해 외교적 설득 노력
- 2 18일 일본 마이스리선, 日 해상보안청이 오는 20일 독도부근 수로 측량위해 탐사선 출항 계획 보도
- 3 20일 일본 탐사선 우리측 EEZ진입, 해경, 경교함 등으로 필수 명명
- 4 일본 탐사선 측량 강행시 동해해경, 일제내기 등 실력행사
- 5 사태 추이에 따라 검색 또는 나포 등 무력 충돌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민주당 '여론조사 경선' 무얼 남겼나

인재 발굴 되레 막았다

인지도 조사에 그쳐...참신한 후보들 탈락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됐다.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론조사 경선을 적용한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데다 결과도 개혁적이거나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밀실 공천만큼이나 후평을 받고 있다.

◇단순 인지도 조사에 그쳐=우선 민주당의 이번 여론조사 경선은 예비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 단순한 인지도 조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름대로 비전과 경력을 가진 예비 후보들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불운을 겪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역 활동도 중요하지만 예비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별로 기간당원의 여론조사 참여 비율이 제각각으로 정해지는 등 중앙당이 당의 뿌리인 기간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불투명한 심사과정=공직위 공천에서 탈락한 모 후보는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에서 나름대로 경협을 쌓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여론조사=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합쳐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후보로 선정하는가 하면, 오차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을 도입,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실수를 자아내게 했다. 중앙당이 여론조사의 신뢰도 오차 범위를 지지율 순위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공정성 논란을 불렀다.

실제로 다수의 예비 후보들이 오차 범위는 물론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으며, 여론조사 기관간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데도 합산 지지율이 높은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정해지기도 했다.

지역별로 기간당원의 여론조사 참여 비율이 제각각으로 정해지는 등 중앙당이 당의 뿌리인 기간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불투명한 심사과정=공직위 공천에서 탈락한 모 후보는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에서 나름대로 경협을 쌓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앙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대표단 회의가 '변갯불에 콩 구워먹'듯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최종 추천한 것도 논란거리다.

제심특위도 후보 교체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찾간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더구나 제심특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밖으로 흘려 당 내외에 분란을 확산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타당후보들에게 공격 발미를 제공, 득표라는 실이 많았다는 평가다.

순천시장 및 여수시장 후보에 대한 제심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흘러 나오면서 후보 교체론이 떠돌아 기존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심특위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중앙당 및 현역 의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경선은 내가 봐도 부실 덩어리"라며 "중앙당의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당내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엉망이 됐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첫 여성총리 탄생 유력

한명숙 지명자 오늘 국회 인준 무난할 듯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취임의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18일 모두 마치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국민의 정부 말기 첫 여성총리 탄생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장 상 전 이화여대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와는 달리 한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전망은 비관적 '낙관적'인 것으로 점쳐진다.

한나라당이 명시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압도적인 지지와 보수 야당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미뤄볼 때 인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한 지명자에 대해 제기한 사상 이념

검증문제나 외아들의 보직배치 특혜 문제, 사기에 연루된 다단계회사 후원행사 참석 등은 중대해 이념적 편향성 내지 도덕적 흠결로 규정할 정도의 '의문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한 지명자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된 셈이다.

이날 현재 각 정당별 의석수는 전체 297명 중 우리당 142명, 한나라당 125명, 민주당 11명, 민노당 9명, 국민중심당 5명, 무소속 5명.

총리 임명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일단 안전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 만큼 이들 의원이 전 원참석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다 해도 인준안은 통과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총리 청문위원 인준 찬반의견

(O=찬성, △=유보, X=반대)

정 당	청문위원	찬반여부
열린우리당	유재건	O
	유승희	O
	최재천	O
	박영선	O
	이목희	O
한나라당	송영길	O
	이인구	X
	김재원	△
	진수희	△
	김정훈	△
민주당	주호영	X
	박형준	△
민중노동당	단병호	△

“조용한 외교 계속할지 결정 시점”

盧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찬 간담회

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돌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일이기

아 할 논점이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측 EEZ 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작게 보면 해저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EEZ 경계분쟁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 의미가 있다"며 "수년간 오래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EEZ 경계분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창사 54 1952-2006

삼일회계법인은

회계·세무·M&A·Consulting 전문가들이 모여있습니다.

Your worlds

Our people

호/남/본/부
대표전화 : (062)223-3131
F A X : (062)224-1335
http :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

- 홍남부장 백창현
- 공인회계사 경영위원(세무) 양홍선
- 공인회계사 최석봉
- 공인회계사 정병남
- 공인회계사 전병문
- 공인회계사 송진희
- 공인회계사 손원균
- 공인회계사 니금운
- 공인회계사 김대웅
- 공인회계사 정현석
- 공인회계사 김익주
- 공인회계사 김원기
- 공인회계사 홍상호
- 공인회계사 허영서
- 공인회계사 진현성
- 공인회계사 김소영
- 공인회계사 김창훈
- 공인회계사 안종태
- 공인회계사 민창선
- 공인회계사 김기영
- 공인회계사 김민석
- 공인회계사 나성민
- 공인회계사 류동식
- 공인회계사 박석환
- 공인회계사 주연희
- 미국회계사 심승택
- 사원 김해도
- 사원 김혜경
- 사원 한혜경
- 사원 정윤영